

# ‘행복한 성장’을 담아낼 충남경제비전

## —성공적인 경제비전 수립을 위한 조건—

저자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청남도는 지난 12월, 민선 5기 3대 혁신(행정혁신, 자치혁신, 3농혁신)을 이어갈 새로운 3대 행복(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환경)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3대 행복의 핵심과제인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주도의 경제비전을 수립을 통해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 지방정부주도의 새로운 계획에의 도전

과거 우리나라와 지자체의 계획은 정부주도의 계획 일변도였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 모든 시도가 같은 포맷과 내용을 만들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이라고 해도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제도와 예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 한정된 예산, 지역의 자원, 이 세 가지의 제약조건 하에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번 수립하게 될 충남경제비전에서는 이 모든 제약조건을 계획의 기회요인으로 바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되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우선순위의 재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계획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한 무(無)에서 새로운 유(有)의 창조도 그리고 있다.

### 충남 경제주체의 참여적·소통적 계획과정

이번 경제비전의 수립에 있어 가장 핵심은 충남의 모든 경제주체와의 참여적·소통적 계획과정을 통해 상호 학습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인, 학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의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과 과제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 각 실과와 15개 시·군 기획실과 경제비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충남의 미래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각 시군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전계획의 작성을 지원하는 경제비전연구단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충남도내 전 유관기관과 국책연구원, 전문가 등 협업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속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남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비전에 대한 도민수요, 경제이슈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 미래가치를 반영한 충남의 핵심이슈의 발굴

2000년 이후 충남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만큼 폭발적이었다. 전국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GDP 7.2%, 우리나라 수출의 11.3%, 전국 산업단지의 10.5%를 담당할 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 이러한 충남의 경제규모 확대와 성장은 오히려 외부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다양한 해결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제조기반 산업구조로 변화했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요소소득의 40%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역외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과 남부권과의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발달된 산업 역시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최근 3D프린터, ICT융합 등의 세계적 이슈에 따라 산업구조 자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충남에 있어 한 단계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경제비전의 수립에 있어 다양한 미래가치를 반영한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미래 정책의 기준점을 제시코자 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발전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국 어디서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나 경제주체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결과가 된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이전, 농어촌지역의 한계마을의 증가, 지역간의 격차 심화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이를 모두 다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기획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하였고,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되고 보완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